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4월 19일
- 발 의 자 : 김지만·김성태·송영헌·이시복·이영애·임태상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4월 22일
- 상정일자 : 제2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4월 30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지만 의원)

□ 제안이유

-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 초기정착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이들 기업이 대구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구시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 또한 도모하고자함.

□ 주요내용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안 제 32조 제6항).

3. 검토의견 요지 (보고자 : 광영구 전문위원)

○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8.12. 4.)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32조제6항은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대한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재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부칙은 시행령의 부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3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 적용 시행시기를 2019. 6. 5.로 조정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미취업자가 창업 시 혜택을 받고자 악의적으로 가족명의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도 꾸준한 확인이 필요함.	○ 미취업자의 가족관계사항 등 공부상 확인뿐 아니라 현장확인을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음.
○ 공유재산을 감면해주는 경우 감면이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상위법에 따라 5년 이내에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음.
○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공유재산에 대한 연속성있는 이력 관리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추후 대부료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함.	○ 연초에 별도의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지도·확인을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